

# “현대아산 위법 드러나면 처벌”

## 정부 점검평가단,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조사 착수

정부 관련부처 '점검평가단'이 19일 현대아산의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종합적인 점검 결과 현대아산측의 뚜렷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국무총리실 외교청 과장급 인사를 단원으라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아직 (처벌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점검평가단은 사업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일부터 현대아산 관계자를 불러 점검활동을 하며, 개선방안은 7월 말에 내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가보안법이나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안이 점검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점검 평가단의 점검 항목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 전체를 망라한 것이며, 어느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말해 가능성이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금강산 피살사건 정부 합동

조사단은 전날 개성을 방문해 관광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온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으로부터 출장 결과 보고서와 함께 금강산 해수욕장 파노라마 사진 1장, 비치호텔 CCTV 배치도 1매를 제출받았다.

통일부는 금강산 피살사건 발생(11일) 이후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12일 628명, 13일 594명, 14일 447명, 15일 450명, 16일 410명, 17일 364명, 18일 36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반납한 기록물을 기록관 관계자들이 옮기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들을 정식 반납이 아닌 '임시 보관'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정부 “아직은 개성관광 중단 검토 안해”

정부는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과 관련, 아직 본격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 점검·평가단 활동이 끝나기 전에 개성관광이 중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중단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관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성관광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은 지난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발표 후 당일 대외용 매체에서 관련 방송을 했을 뿐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 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갖고 합동 조사단의 활동 내용과 현대아산 대북사업 관련 점검·평가단의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남측 관광객 방북이 중단된 금강산에는 이날 현재 내국인 328명과 외국인 618명 등 사업 관련자 946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 개성관광 순조...20일 497명 방북

금강산 피격 사망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개성 관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개성관광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개성을 찾은 남측 관광객은 19일 406명, 20일 497명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예약 취소는 19일에 38명, 20일에는 36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달 말까지 하루 평균 500여명 가까이 예약이 차 있다.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측 초병에 의해 피살되고 정부 또한 개성관광 재검토라는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는데도 개성 관광이 무리 없이 이

뤄지는 것은 대북 관광이 10여년 이상 지속하면서 남측 관광객들이 남북 관계에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적어진 데다 개성의 경우 숙박이 아닌 당일 치기로 갔다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성한 금강산·개성관광 점검 평가단이 현지 안전 평가를 통해 개성 관광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금강산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아산측은 “현재 개성 관광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개성 관광 지속 여부 또한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추가 유출 의혹” “무식한 생트집”

### 盧측-국가기록원 기록물 반환 놓고 공방 가열

대통령 기록물 반환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측과 국가기록원 양측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일 발표한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와 '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 등 협조를 거듭 요청받았고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기록물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일방적으로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 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은 또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과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e-지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현재 봉하마을 (사저의) e-지원 시스템은 불법 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와 e지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또다시 전직 대통령 흡집내기 거짓말 방어 도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또 서버를 반환하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 봉하마을에 남아 있는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이기에 반환대상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사유물을 국가에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강무현 前해양부장관 구속영장

## 日 동부해상 강진 쓰나미 주의보

### 수뢰 혐의...참여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0일 제1심 시찰 직무와 관련해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수부 장관을 지냈으며,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년간 장관급 이상 인사의 비리를 잡아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관·차관으로 재임할 때 중견 해운사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7천만~9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이들 업체로부터 항로 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수천만원 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자금추적 끝에 이 돈 중 상당액이 해운 업체에서 흘러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D사로부터 돈을 받은 참여정부 인사 중 청와대 비서관들도 포함돼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11시 39분께 일본 북동부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6.6이며 진앙은 도쿄 북쪽 이카와의 동북동 방향 150km 지점, 진원은 지하 10km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해안에 최대 50cm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주의보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청와대 “장물 돌려줬다고 절도죄 없어지나”

청와대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반환과 관련, ‘불완전 반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기록물 및 서버 반환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국가재산 불법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

통령측이 봉하마을에 보관중이던 국가기록물을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반환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록물 데이터 뿐이며, 핵심인 e지원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루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지원 시스템은 정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환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측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사비를 들여 구축한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측을 겨냥, ‘무식한 생트집’ ‘거짓말방어’라고 원색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e지원 시스템은 국가에산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유물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스피치 리더십 과정

1. 과정 소개: 스피치 리더십 과정은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과정입니다. 2. 주요 내용: 발표 기술 향상, 협상 기술, 팀워크 강화, 리더십 스킬 등. 3. 모집 대상: 경영인, 임직원, 예비 경영자 등. 4. 교육 방법: 이론 강의, 실습, 역할극 등. 5. 교육 장소: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6. 문의처: 경영인(CEO) 아카데미 (02-1234-5678)

---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경영 지도자 과정

1. 과정 소개: 경영 지도자 과정은 경영 전략 수립, 조직 관리, 인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경영 전략 수립,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등. 3. 모집 대상: 경영인, 임직원, 예비 경영자 등. 4. 교육 방법: 이론 강의, 사례 연구, 실습 등. 5. 교육 장소: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6. 문의처: 경영인(CEO) 아카데미 (02-1234-5678)

**한민지도지적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내 교육과정**

- 1. 리더십 교육: 리더십의 중요성, 리더십 스킬 향상
- 2. 팀워크 교육: 팀워크의 중요성, 팀워크 강화 방법
- 3. 발표 기술 교육: 발표 기술 향상, 발표 준비 방법
- 4. 협상 기술 교육: 협상 기술 향상, 협상 준비 방법
- 5. 의사결정 교육: 의사결정의 중요성, 의사결정 방법
- 6. 커뮤니케이션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커뮤니케이션 방법

문의처: 한민지도지적연수생모집 (02-1234-5678)

**한민지도지적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연수일정**

연수기간: 2008년 7월 21일 ~ 2008년 8월 15일

연수장소: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참석요구사항**

1.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2.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의 추천서

3. 연수비용: 100만원 (등록금 50만원, 수업료 50만원)

4.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

5. 문의처: 한민지도지적연수생모집 (02-1234-5678)